

“내란수괴도 고령·초범이면 감경? ... 또 다른 내란이자 배신”

범여권·지역 정치권, 재판부 규탄... 항소심서 법정 최고형 촉구 국힘 소장파 “尹과 절연” 촉구... 민주, 오늘 사면법 개정안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당을 비롯한 진보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은 “국가 근간을 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을 기만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내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국화로 달랠까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을 명백히 퇴행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판부가 ‘고령’이나 ‘범죄 전력 없음’을 감경 사유로 든 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실패한 내란은 깎아주느냐”며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른바 ‘노상일 수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법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20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확인됐고, 권력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면서도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윤 전 대통령의 물리적 강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온몸으로 막아냈기 때문인데, 이를 범죄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와 전남 지역 정치권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전두환 사면의 뼈아픈 후과를 기억하는 광주로서는 향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결단코 반대한다”며 “불의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중한 단죄만이 답”이라고 썰기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스스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다고 인정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65세 청년에게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선처다. 자제된 내란, 초범 내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일갈했다.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번 선고를 윤 전 대통령을 제2의 전두환에 빗대며 ‘또 다른 내란이자 배신’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헌정 전복 범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우리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송구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세력과의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절연’이라는 단어는 피했다.

이에 반발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김재섭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반헌정적 범죄임이 드러난 이상, 윤 전 대통령 및 그 추종 세력과 완벽하게 절연하는 것만이 보수가 다시 살 길”이라며 굵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도선민 기자 sunin@kwangju.co.kr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 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특별시 정부 지원 후속 입법 나설 것”

신정훈, 특별법 행안위 통과 주도... “주 청사 소재지 결정 공론화 기구 구성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적법성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정훈(나주·화순·사진) 국회의원은 특별법안 마련에 동참하고 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주도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정부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후속 협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 일문일답.

—특별법 통과와 가장 큰 의미는. ▲전남광주안은 413개 조문이 반영돼 타 권역보다 많은 내용을 담았다. 시도민 기대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후후무한 진전이다. 특히 무안공항과 연계한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원 특례는 대구·경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만큼 관철해 낸 성과다.



—통합특별시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대책은.

▲통합이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을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초광역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 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부시장·감사위원장 인사청문 권한을 명문화하는 등 집행부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또 전남과 광주의 인구·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통합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한 조항이 부칙에 반영됐다.

—재정 특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통합특별시의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다만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행·재정 지원 의무는 명시했다. 이는 향후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을 담보할 토대가 될 수 있다. 본회의까지 재정분권 TF를 통해 교부세 구조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약속을 뒷받침할 후속 협약이나 입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자치구 재정 독립과 교부세 문제는. ▲자치구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다. 다만 자치구 보충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확보했다. 또한 범 조항에 자치구 권한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배분 체계가 직접 교부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통합청사 소재지 현안에 대한 입장은.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 소재지 결정을 당선인에게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은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도선민 기자 sunin@

민형배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 선포

전남광주전력공사 설치 등 권역별 특화 전략 제시 ‘통합경제 청사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사진)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를 에너지 생산하고 인공지능(AI)을 실증하며 우주와 농생명 결합된 신산업 주도형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전남 신성장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남광주전력공사와 ‘K푸드산업공사’ ‘국토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설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지난 2일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공간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남해안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미래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지방에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은 전남광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



산지이고 용수와 산업용지 등 최적의 투자 유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AI 실증 인프라와 항만, 공항을 모두 갖춘 수출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강력한 행정 플랫폼까지 마련될 경우 모든 여건을完비한 곳은 전남·광주뿐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에너지 활용 구조 변화, RE100 산업 벨트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변화, 첨단기술과 녹색 환경 공존하는 정주 여건 조성, 교통망 혁신, 메가 물류클러스터 구축 등 6개 혁신 조건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신산업, 신경제, 신성장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

인재영입 작업 속도... 23일부터 주 1~2차례 영입인재 발표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울 정책연구단체 Team. Fe 대표(여·1989년생), 이동진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

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인재영입 회의를 열었다. 그는 “오는 23일 최고위 직후 장동혁 대표가 직접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매주 1~2회 영입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